

2011년도 제22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A	① 민법 ② 경제원론	80분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5년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대리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을 진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③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법률행위에는 민법의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④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을 갖는다.

4. 2008년 3월 5일 탑승했던 비행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甲에게 2010년 3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乙은 甲의 배우자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은 2008년 3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ㄴ. 2011년 4월 5일 甲이 종래의 주소지로 살아 돌아와 자신의 부동산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ㄷ. 2009년 4월 5일 선의인 乙이 丁에게 甲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甲의 생환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ㄹ.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하여 戊에게 2010년 4월 5일 매각한 후 甲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戊가 선의라면 乙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12. 甲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 乙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뒤, 다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 乙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乙은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乙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는 무효이다.
- ②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③ 乙명의의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丁이 甲과 乙 사이의 가장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丙은 丁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과 乙이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乙은 가등기한 때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이다.

13. 乙은 甲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②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취득시효완성을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후 甲이 다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다시 20년 넘게 점유한 경우,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4.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채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②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채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④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가 아니다.
-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⑤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③ 진정한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 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②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다.
- ③ 乙은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과 혼인한 경우, 丙명의로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

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Y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 ②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③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에게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甲에게 X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②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3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②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③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으나 상속할 수 있다.
- ④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 ⑤ 법인 아닌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등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2. 甲은 乙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丙은 甲으로 행세하는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乙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甲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甲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丙이 乙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된다.
- ② 乙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丙은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3. 甲의 아들 乙은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丙은 甲이 추인한 후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해 丙은 대항할 수 없다.
- ③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사망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해도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②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がある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 ⑤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2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6.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
- ② 종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작성 등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다.
-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무효이다.
- 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32.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乙·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소유의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甲·乙·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甲·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3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이전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3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 ② 등기가 멸실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5.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④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36.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甲의 지분은 2/3, 乙의 지분은 1/3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공유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분할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때에는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③ 丙이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단독으로 X토지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乙이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甲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단독으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경제원론

3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③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

38.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② 물상보증인 丁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단독으로 丁을 상속한 때에는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③ 甲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 ④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9.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경매청구권 ② 물상대위권
- ③ 별제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 ⑤ 간이변제충당권

40.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산질권은 점유개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 ③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 ⑤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41.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가능곡선상에는 두 개의 재화생산조합점 $(x_1, y_1)=(200, 300)$ 과 $(x_2, y_2)=(240, 290)$ 이 있다. 다음 중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재화생산조합점 (x_3, y_3) 은? (단, x_1, x_2, x_3 는 각각 X재의 생산량, y_1, y_2, y_3 는 각각 Y재의 생산량)

- ① (160, 310) ② (160, 315) ③ (280, 270)
- ④ (280, 280) ⑤ (280, 285)

42. X재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매량이 10% 감소하였다.
- ② 판매량이 50% 감소하였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이다.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43. 2009년과 2010년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명목GDP(10억원)	GDP디플레이터
2009	9,600	120
2010	10,500	125

2009년 대비 2010년의 실질GDP 증가율은? (단, GDP디플레이터의 기준년도는 2005년)

- ① 4.2% ② 5% ③ 6.7% ④ 8% ⑤ 9.4%

44.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 ② 투자가 GDP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에는 저축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 ③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이론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다.
- ④ 저축의 증가는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이다.
- ⑤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킨다는 가설이다.

45. 두 재화 X와 Y의 가격이 제1기에 $P_X=10, P_Y=40$ 이였으며, 甲은 재화소비조합점 $(x, y)=(60, 20)$ 을 선택하였다. 현시선호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 y 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 P_X 와 P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

ㄱ. 제2기에 가격이 $P_X=20, P_Y=30$ 으로 변화했을 때, 甲이 재화소비조합점 $(65, 15)$ 를 선택했다면 甲의 선택은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ㄴ. 제2기에 가격이 $P_X=20, P_Y=20$ 으로 변화했을 때, 甲이 재화소비조합점 $(50, 30)$ 을 선택했다면 甲의 선택은 약공리를 위배한다.
 ㄷ.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항상 성립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6. 소비자 선호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용함수가 $U=X+Y$ 이고,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높을 때 X재만을 소비한다.
 ② 효용함수가 $U=\min\{X, Y\}$ 이라면 항상 동일한 양의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③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④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성질은 선호체계의 이행성으로부터 도출된다.
 ⑤ 효용함수가 $U=(X+Y)^2$ 이면,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47.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J-curve 효과는 ‘환율이 (ㄱ)하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초기에는 (ㄴ)되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도) (ㄷ)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단, 환율은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 양국의 물가수준은 불변)

- ① ㄱ. 상승, ㄴ. 악화, ㄷ. 개선
 ② ㄱ. 상승, ㄴ. 개선, ㄷ. 개선
 ③ ㄱ. 상승, ㄴ. 악화, ㄷ. 악화
 ④ ㄱ. 하락, ㄴ. 악화, ㄷ. 개선
 ⑤ ㄱ. 하락, ㄴ. 악화, ㄷ. 불변

48.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②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인플레이션율과 해외 인플레이션율은 항상 같다.
 ③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이 1이 된다.
 ④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구매력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은 감소한다.
 ⑤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의 존재가 구매력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49. 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수준, M은 자산액)

- ① 폰 노이만-모겐스틴(Von Neumann-Morgenstern) 효용함수에서 효용은 서수적 의미만 갖는다.
 ② 甲이 가지고 있는 복권 상금의 기대가치는 500이고 이 복권을 최소 450에 팔 용의가 있다면, 50을 甲의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으로 볼 수 있다.
 ③ 위험기피자는 기대가치가 0인 복권을 구입할 것이다.
 ④ 위험선호자는 기대가치가 0인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⑤ 乙의 폰 노이만-모겐스틴 효용함수가 $U=M^{1.5}$ 로 주어졌다면, 乙은 위험기피자이다.

50.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U=-\sqrt{X}+Y$ 이며, 예산제약식은 $3X+2Y=10$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U는 효용, $X \geq 0, Y \geq 0$)

- ① 0
 ② 2/3
 ③ 1.5
 ④ 5
 ⑤ 10

51. 케인즈의 단순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10만큼 증가한다면 정부지출승수는?

- ① 0.2
- ② 0.5
- ③ 0.8
- ④ 2
- ⑤ 5

52.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AK$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 는 생산량, A 는 생산성수준이며 0보다 큰 상수, K 는 자본량)

- ㄱ.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일정하다.
- ㄴ. 자본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증가한다.
- ㄷ. 노동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증가한다.
- ㄹ. 자본의 증가율과 생산량의 증가율은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53. X재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은 $Q^s = -110 + 2P$ 이고, 시장수요곡선은 $Q^d = 400 - 4P$ 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X재에 대하여 단위당 6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수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 는 가격, Q^s 는 공급량, Q^d 는 수요량)

- ① 6
- ② 12
- ③ 16
- ④ 20
- ⑤ 24

54. 생산함수가 $Q=5L^{0.4}K^{0.6}$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 L, K 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 ① $L=K$ 일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은 일정하다.
- ②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탄력성은 L, K 값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 ③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모양을 갖는다.
- ④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
- ⑤ 한계기술대체율은 L, K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55.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
- ② 임금의 삭감
- ③ 정부지출의 증가
- ④ 환경오염의 증가
- 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5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방법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리카디언(Ricardian)의 동등성 정리
- ②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 정리
- ③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정리
- ④ 애로(Arrow)의 불가능성 정리
- ⑤ 오쿤(Okun)의 법칙

57. 甲과 乙이 총 금액 10만원을 나누어 갖는 2인 비협조게임에서 규칙은 보기와 같다. 다음 전략 중 내쉬균형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甲과 乙이 각각 10만원 미만에서 만원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동시에 제시한다.
- 甲과 乙이 제시한 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제시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각각 5만원씩을 받으며, 제시한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적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은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고,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은 나머지 금액만을 받는다.
- 甲과 乙이 제시한 금액의 합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각자 제시한 금액을 받고 10만원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폐기된다.

- ① 甲 2만원, 乙 9만원
- ② 甲 4만원, 乙 6만원
- ③ 甲 5만원, 乙 6만원
- ④ 甲 8만원, 乙 2만원
- ⑤ 甲 9만원, 乙 1만원

58.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C=2q^3-12q^2+48q$ 로 동일하다. 이 시장에서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은?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 $q>0$)

- ① 3
- ② 10
- ③ 15
- ④ 30
- ⑤ 35

59. A은행의 T-계정은 다음과 같다.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0억원	예금	4,000억원
대출	3,000억원		

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A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액은? (단,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은 0)

- ① 600억원
- ② 1,000억원
- ③ 4,000억원
- ④ 6,000억원
- ⑤ 1조원

60.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인 경우에만 단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 ㄴ.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 ㄷ.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정부의 재량적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 ㄹ.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ㄹ
- ⑤ ㄷ, ㄹ

61. 솔로우(Solow) 단순경제성장모형에서 총생산함수가 $Y=2L^{0.5}K^{0.5}$ 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국민소득(y)의 값은? (단, Y 는 총국민소득, L 은 노동투입량, K 는 자본투입량, $y = \frac{Y}{L}$, $k = \frac{K}{L}$, $y > 0$, $k > 0$)

- 민간부문만 있는 폐쇄경제이다.
- 인구증가율은 0이다.
- 저축함수는 $S=0.2Y$ (S 는 저축)
- 각 기간의 저축과 투자는 일치한다.
- 자본의 감가상각율은 0.1이다.

- ① 2
- ② 4
- ③ 8
- ④ 12
- ⑤ 16

62. 수요독점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곡선은 우하향,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요독점기업은 상품시장에서도 독점기업임]

- ① 이 노동시장의 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고용량보다 적다.
- ②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사이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 ③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④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낮다.
- ⑤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사이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경우 노동의 평균요소비용과 한계요소비용이 모두 감소한다.

6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정부개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시장실패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④ 시장실패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⑤ 코즈(Coase)정리에 의하면 시장실패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

64.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효과(Fisher effec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상승한다.
- ② 피셔효과는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율을 뺀 것이다.
- 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 ④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⑤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과는 연관이 없다.

65. IS곡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 ①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낸다.
- ② 현재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점이 IS곡선보다 위쪽에 있다면, 생산물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④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질수록 IS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66.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 ①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 ②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한다.
- ③ 단기적으로 균형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 ④ 공급곡선이 존재한다.
- ⑤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은 우상향한다.

67. 가변생산요소가 하나인 기업의 단기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곡선은 U자 모양, 고정비용 존재, 생산요소가격은 불변)

- 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할 때 한계생산물이 체감한다.
- ②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좌측에 위치한다.
- ③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때 평균총비용이 상승한다.
- ④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 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이 감소한다.

68.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프리드만(M. Friedman)은 통화량을 일정률로 증가시키는 통화준칙을 주장한다.
- ㄴ. 새고전학과(New Classical School)는 예측되는 정책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ㄷ. 새케인즈학과(New Keynesian School) 이론 중에는 메뉴비용(menu cost)의 존재로 총수요관리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ㄹ. 실물경기변동론자들은 기술충격에 의한 총공급의 변동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 ㅁ. 케인즈학과(Keynesian School)는 총공급의 변동이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69.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화량 증가율을 증가시키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 ② 통화량 증가율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 ③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질 국민소득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
- ④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 ⑤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이자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70. 총수요-총공급(AD-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 ① 독립투자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②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③ 조세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 ④ 통화공급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 ⑤ 기술 진보는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7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 ① 공급자의 수가 소수이며, 제품의 품질이 동일한 경우이다.
- ②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의 이윤은 0이다.
- ③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가 많은 경우이다.
- ④ 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한계수입보다 낮다.
- ⑤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72. 다음 ()안의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후방굴절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소득 선택모형에서 임금율의 변화에 따라 도출되는 (ㄱ) 소비곡선에서 유도되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비교할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ㄴ)효과가 더 크다.

- ① ㄱ. 임금, ㄴ. 대체
- ② ㄱ. 가격, ㄴ. 소득
- ③ ㄱ. 가격, ㄴ. 대체
- ④ ㄱ. 소득, ㄴ. 소득
- ⑤ ㄱ. 소득, ㄴ. 대체

73. 다음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개방경제의 모형이다.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항상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통화량 증가 전과 후의 균형국민소득의 차이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L^D 는 실질화폐수요, L^S 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국내 이자율, 국내 이자율 수준은 해외 이자율 수준과 같다.)

$Y=C+I+G+X-M$ (생산물 시장의 균형)
 $L^D = \frac{L^S}{P}$ (화폐시장의 균형)
 $C=50+0.8Y$, $I=100-4r$, $G=50$
 $X=30$, $M=30$
 $L^D=0.2Y-2r$, $L^S=100$

- ① 0
- ② 20
- ③ 40
- ④ 80
- ⑤ 100

74.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이 성립할 경우 정부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 ①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 ②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 ③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 ④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감 불분명
- ⑤ 균형이자율 등락 불분명, 균형거래량 증가

75. 10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공공재에 대한 개별가구의 수요함수는 $Q=100-10P$ 로 동일하고, 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5로 일정하다. 이 마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 ① 50
- ② 95
- ③ 125
- ④ 250
- ⑤ 500

7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많다.
- ② 소비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소비량은 시장균형소비량보다 적다.
-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로는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다.
- ④ 교정적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부의 조세수입도 증대시킨다.
- ⑤ 오염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총오염배출량이 결정된다.

77.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2기간 최적 소비선택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별로 소비되는 재화는 모두 정상재, 차입제약은 없고, 각 기간의 소비는 모두 0보다 큼)

- ㄱ. 제1기의 소득증가는 제1기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 ㄴ. 제2기의 소득증가는 제2기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 ㄷ.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제2기의 소비는 증가한다.
- ㄹ. 제2기의 소득증가는 제1기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8. 한계소비성향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 ② 소비를 저축으로 나눈 것이다.
- ③ 소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 ④ 소비의 증가분을 저축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이다.
- ⑤ 소비의 증가분을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이다.

79. 독점기업이 시장을 A, B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으로 일정하고 현재 A, 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2와 3이다. A, B 두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 ① A: 30, B: 20
- ② A: 20, B: 15
- ③ A: 15, B: 10
- ④ A: 20, B: 30
- ⑤ A: 25, B: 30

80. 생산함수가 $Q=2L+3K$ 일 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 ① 0
- ② 1
- ③ $\frac{2}{3}$
- ④ 1.5
- ⑤ 무한대(∞)

2011년 제22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정답

1교시 A형

민법

1	3	2	2	3	1	4	5	5	5
6	4	7	2	8	1	9	1	10	4
11	5	12	5	13	1	14	4	15	2
16	2	17	3	18	3	19	4	20	5
21	2	22	4	23	3	24	4	25	2
26	1	27	3	28	5	29	3	30	1
31	2	32	4	33	5	34	3	35	4
36	2	37	3	38	5	39	2	40	1

경제원론

41	3	42	5	43	2	44	3	45	4
46	1	47	1	48	2	49	2	50	4
51	5	52	2	53	5	54	1	55	3
56	1	57	3	58	4	59	4	60	5
61	3	62	5	63	5	64	1	65	2
66	1	67	3	68	3	69	4	70	4
71	2	72	2	73	1	74	5	75	2
76	4	77	1,2,3,4,5	78	5	79	2	80	5

2교시 A형

회계학

1	5	2	5	3	1	4	4	5	1
6	5	7	1,2,3,4,5	8	4	9	2	10	3
11	2	12	1	13	2	14	4	15	1
16	3	17	3	18	2	19	1	20	1
21	4	22	3	23	3	24	3	25	4
26	1	27	1	28	3	29	2	30	4
31	2	32	5	33	2	34	5	35	5
36	4	37	4	38	5	39	5	40	2

부동산관계법규

41	5	42	1	43	5	44	5	45	3
46	4	47	4	48	5	49	1	50	2
51	4	52	1	53	3	54	2	55	5
56	3	57	1	58	1	59	3	60	5
61	4	62	3	63	5	64	1	65	2
66	4	67	2	68	3	69	3	70	2
71	2	72	4	73	4	74	1	75	2
76	2	77	5	78	5	79	2	80	3

2011년도 제22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2교시	A	① 회계학 ② 부동산관계법규	80분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자산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② 현행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적합하다.
- ③ 현행유출가치는 청산가치의 측정척도가 된다.
- ④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회계이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
- ⑤ 현금흐름할인가치는 자산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측정기준이지만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무적인 이유로 52주의 보고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④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를 할 때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3. (주)서울은 현재의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2%, 액면금액 ₩1,000,000의 일반사채를 액면발행할 수 있다.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할증금이 없으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25,000, 행사비용은 100%이며, 각 신주인수권은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주를 매입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 (단,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음)

	(3년 기준)	연 8%	연 12%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0.7938	0.7118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2.5771	2.4018

- ① ₩96,056
- ② ₩98,065
- ③ ₩100,092
- ④ ₩110,029
- ⑤ ₩120,092

4. (주)서울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며, 연 10% 배당을 지급하는 비누적적·비참가적우선주 1,000주가 유통되고 있다. 20×1년 10월 1일에 보통주 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주)서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액면가액은 각각 ₩5,000이다. (주)서울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8,000,000일 경우,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함)

- ① ₩2,125
- ② ₩2,250
- ③ ₩3,333
- ④ ₩3,529
- ⑤ ₩4,375

5. (주)서울의 20×9년 당기순이익은 ₩1,5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서울의 20×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계산하면? (단,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계산할 것)

· 감가상각비	₩150,000
· 사채의 발행	700,000
· 선급비용의 감소	20,000
· 미지급비용의 증가	30,000
· 현금배당	100,000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12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 ① ₩1,780,000 ② ₩1,820,000 ③ ₩1,860,000
 ④ ₩1,920,000 ⑤ ₩1,960,000

6.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면?

· 당기근무원가 ₩450,000
· 기초 확정급여채무 금액 ₩900,000 (할인율 연 10%)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150,000, 기대수익 ₩120,000
· 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과거 근무원가 중 당기손익인식금액 ₩80,000

- ① ₩424,000 ② ₩444,000
 ③ ₩450,000 ④ ₩494,200
 ⑤ ₩500,000

7. 리스이용자인 (주)서울은 20×0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이다.
· 리스기간은 8년이고 리스료 ₩15,000을 매년 초에 선급한다.
· 리스계약만료일(20×8년 12월 31일)에 동 리스자산을 ₩24,000에 구입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다. (주)서울이 동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동 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은 연 12%이다.
·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83,457이고 염가매수선택권의 현재가치는 ₩9,694이다.

20×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리스부채의 잔액은?

- ① ₩60,242 ② ₩72,529 ③ ₩73,442
 ④ ₩78,151 ⑤ ₩89,329

8.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제작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② 하나의 공연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행사를 위한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③ 학원수강료는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창업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수취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9. (주)서울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800,000(사용가치 ₩900,000)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주)서울은 동 기계장치를 손상처리하였다. (주)서울이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20×2년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계산하면?

- ① ₩640,000 ② ₩740,000 ③ ₩840,000
 ④ ₩880,000 ⑤ ₩900,000

10.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 및 측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②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③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④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1. (주)서울은 20×0년 상반기에 건설계약(총 계약금액 ₩24,000,000)을 수주하여 20×1년 중에 완료하였으며 동 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동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년	20×1년
해당연도에 발생한 원가	₩4,000,000	₩12,250,000
연도 말에 추정할 예상추가원가	12,000,000	-
청구한 금액	4,500,000	18,000,000
결제 받은 거래대금	3,000,000	19,500,000

(주)서울이 동 건설계약에 관하여 20×1년에 인식할 이익은?

- ① ₩2,000,000 ② ₩5,750,000 ③ ₩7,750,000
 ④ ₩8,000,000 ⑤ ₩9,750,000

12. 다음은 20×1년 말 (주)서울의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0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000,000
· 미인식 보험수리적 이익	2,500,000
·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10년

(주)서울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접근법방식에 따라 최소한만 인식한다고 할 때, 20×2년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은?

- ① ₩150,000 ② ₩160,000 ③ ₩200,000
 ④ ₩250,000 ⑤ ₩260,000

13.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보통주 30%를 ₩3,000,000에 취득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취득시점에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10,000,000으로 동일하다. (주)한국의 연도별 당기순손익과 현금배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당기순손익	현금배당 지급액
20×1	₩3,000,000 손실	₩1,500,000
20×2	8,000,000 손실	-
20×3	3,000,000 이익	-

(주)서울이 20×3년에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 ① ₩100,000 ② ₩150,000 ③ ₩300,000
 ④ ₩750,000 ⑤ ₩900,000

14. 다음 거래들 중에서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높이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유하고 있던 설비자산(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2,000)을 차량운반구(장부금액 ₩8,000, 공정가치 ₩10,000)와 교환하였는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ㄴ. 보유중인 유휴자산(장부금액 ₩100,000)을 ₩40,000에 매각하고 현금 수취하였다.
 ㄷ. 채고자산(장부금액 ₩30,000)을 재구매 조건으로 ₩50,000에 처분하였다.
 ㄹ. 보관중인 무이자부 어음(액면금액 ₩10,000)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현금 ₩7,000을 수취하였다. 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한다.
 ㅁ.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주를 주당 ₩12,000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5,000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①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5. (주)서울은 20×1년 7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0,000인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5,000에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0×1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 사용에 의한 매출로 200매가 회수되었으며, 그 매출과정에서 ₩2,500,000이 거스름돈으로 지급되었다. 20×1년에 (주)서울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수익(순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 ① ₩16,500,000 ② ₩17,500,000 ③ ₩19,000,000
 ④ ₩20,000,000 ⑤ ₩95,000,000

16. (주)서울의 20×1년과 20×2년 결산 마감 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20×2년
매출원가	₩1,000,000	₩1,500,000

20×3년에 (주)서울의 회계담당자는 20×0년 말 재고자산이 ₩200,000 과소계상 되었고, 20×1년 말 재고자산이 ₩100,000 과소계상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동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서울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100,000만큼 과소계상되어 있다.
- ② (주)서울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000,000이었다면, 20×2년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2,900,000이다.
- ③ (주)서울의 20×1년의 오류수정 후 매출원가는 ₩900,000이다.
- ④ (주)서울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 ⑤ (주)서울의 20×2년의 오류수정 후 매출원가는 ₩1,600,000이다.

17. (주)서울농장은 20×1년 1월 1일에 1년된 돼지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주)서울농장은 20×1년 7월 1일에 1.5년된 돼지 5마리를 한 마리당 ₩100,000에 매입하였고, 20×1년 7월 1일에 돼지 6마리가 태어났다. 돼지의 일자별 한 마리당 순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서울농장이 동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익에 반영할 평가이익은? (단, 20×1년 중 매각되거나 폐사된 돼지는 없다고 가정함)

일 자	내 용	한 마리당 순공정가치
20×1. 1. 1	1년된 돼지	₩80,000
20×1. 7. 1	1.5년된 돼지	100,000
20×1. 7. 1	새로 태어난 돼지	50,000
20×1. 12. 31	0.5년된 돼지	70,000
20×1. 12. 31	2년된 돼지	130,000

- ① ₩300,000 ② ₩650,000 ③ ₩1,070,000
- ④ ₩1,430,000 ⑤ ₩1,950,000

18. 회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이 하나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서 다른 회계원칙(GAAP)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이라 한다.
- ②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가 변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③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④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19. (주)서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을 지출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는 (주)서울의 책임임)

항 목	금 액
토지 구입대금	₩1,000,000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50,000
토지 취득 및 등록세	80,000
신축공장 건축허가비	5,000
신축공장 건물설계비	60,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35,000
건물공사원가	1,500,000
건물 완공 후 조경공사비 (내용연수 : 영구적)	25,000
배수시설 공사비 (내용연수 : 영구적)	12,000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 (내용연수 : 3년)	14,000

- ① ₩1,202,000 ② ₩1,216,000 ③ ₩1,322,000
- ④ ₩1,350,000 ⑤ ₩1,364,000

20. 20×6년 1월 1일 (주)서울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설비의 취득원가는 ₩500,000이고 정부보조금은 ₩200,000으로 설비취득일에 전액 수령하였다. 동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2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이 동 설비를 20×9년 1월 1일 ₩1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설비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위의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관련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 ① ₩18,000 이익 ② ₩18,000 손실
- ③ ₩62,000 이익 ④ ₩62,000 손실
- ⑤ ₩92,000 이익

21.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 ②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자산의 최초인식일이 된다.
- ③ 리스기간 중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④ 리스의 분류는 리스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⑤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그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22. (주)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정가치모형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후속측정을 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년에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구 분	20×1년 초 취득원가	20×1년 말 공정가치	20×2년 말 공정가치
건물 (투자부동산)	₩1,000,000	₩1,200,000	₩1,100,000
토지 (유형자산)	5,000,000	4,750,000	5,050,000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 ① ₩50,000 손실 ₩0
- ② ₩150,000 이익 ₩50,000 손실
- ③ ₩150,000 이익 ₩50,000 이익
- ④ ₩200,000 이익 ₩0
- ⑤ ₩100,000 이익 ₩50,000 손실

23. (주)서울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를 다음과 같은 조건(ㄱ, ㄴ, ㄷ) 가운데 하나로 (주)한국의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주)서울의 입장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높은 순서로 배열된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함)

ㄱ. (주)서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85,000이며, (주)한국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주)서울은 교환시 현금 ₩15,000을 지급하였다. 단, 이 거래는 상업적실질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ㄴ. (주)서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90,000이며, (주)한국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주)서울은 교환시 현금 ₩20,000을 수령하였다. 단, 이 거래는 상업적실질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ㄷ. (주)서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90,000이며, (주)한국의 동종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주)서울은 교환시 현금 ₩25,000을 수령하였다. 단, 이 거래는 상업적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이다.

-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ㄱ

24.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영업사원 2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각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4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서울은 종업원 중 30%가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로 20×1년과 20×2년에 각각 15명이 퇴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서울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반영될 주식보상비용은?

- ① ₩12,500,000 ② ₩15,500,000 ③ ₩17,500,000
- ④ ₩19,500,000 ⑤ ₩21,500,000

25. (주)서울은 20×1년 초에 (주)한국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주)한국의 주주들에게 ₩55,000,000을 지급하였다. 합병시점에서 (주)한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유동자산	₩27,000,000	₩31,000,000
유동자산	8,000,000	9,000,000
비유동부채	5,000,000	6,000,000
유동부채	6,000,000	6,000,000

이 합병을 통해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은?

- ① ₩0 ② ₩3,000,000 ③ ₩4,000,000
 ④ ₩27,000,000 ⑤ ₩31,000,000

26. 다음은 (주)서울의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기 초	기 말
매입채무	₩300,000	₩375,000
재고자산	850,000	820,000

이 기간 중 매출원가가 ₩1,155,000일 경우, (주)서울이 재고자산 매입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단, 재고자산 매입거래는 모두 외상매입이며 재고자산 평가손익과 감모손실은 없음)

- ① ₩1,050,000 ② ₩1,080,000 ③ ₩1,120,000
 ④ ₩1,155,000 ⑤ ₩1,260,000

27. (주)서울은 20×7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이자만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율 연 10%, 3년 만기, 수익상환사채를 ₩10,500에 발행하였다. (주)서울은 수익상환선택권을 행사하여 20×9년 1월 1일 동 사채 전체를 ₩10,300에 상환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 ① ₩115 손실 ② ₩115 이익 ③ ₩315 손실
 ④ ₩315 이익 ⑤ ₩200 손실

28.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 ① 금융원가
 ② 법인세비용
 ③ 감가상각비용
 ④ 세후 중단영업손익
 ⑤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29.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구 분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취득일	20×0. 9. 1	20×0. 10. 5
취득원가	₩500,000	₩600,000
20×0년 말 공정가치	₩550,000	₩560,000

자금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서울이 20×1년 4월 1일에 동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전부를 각각 ₩600,000과 ₩580,000에 처분하였다면, 이 거래로 인하여 (주)서울이 20×1년 당기손익에 반영할 금액은? (단, 손상징후는 없음)

- ① ₩20,000 손실 ② ₩30,000 이익
 ③ ₩40,000 손실 ④ ₩50,000 이익
 ⑤ ₩60,000 이익

30.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금액이 ₩500,000인 사채(액면이자 ₩40,000 매년 말 지급, 시장이자율 연 10%, 3년 만기)를 ₩475,122에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동 일자에 (주)한국이 발행금액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보유목적 등의 변화로 인하여 동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한편 20×1년 말 시장이자율이 연 12%로 상승하였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466,204	₩482,151

(주)한국이 동 자산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평가손실과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발행 및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 최초 인식 및 분류변경 또한 적절하였다고 가정, 현재가수는 다음과 같음)

(2년 기준)	연 12%
단일금액 ₩1의 현재가수	0.797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수	1.6901

20×1년 평가손실 20×2년 이자수익

- ① ₩8,918 ₩47,512
 ② ₩13,253 ₩47,512
 ③ ₩13,253 ₩48,263
 ④ ₩16,430 ₩48,263
 ⑤ ₩16,430 ₩57,916

31. (주)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컴퓨터와 프린터)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	연간 원가동인 수	연간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생산준비	생산준비시간	600시간	₩900,000
재료이동	재료이동횟수	1,800회	1,080,000
기계사용	기계작업시간	400시간	1,200,000
수선유지	기계작업시간	400시간	800,000

컴퓨터에 대한 생산량 및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한 컴퓨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생산량	2,000단위
생산준비시간	300시간
재료이동횟수	1,170회
기계작업시간	250시간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00

- ① ₩7,562 ② ₩8,201 ③ ₩8,932
 ④ ₩9,653 ⑤ ₩10,052

32. (주)서울의 20×1년 단위당 변동비는 ₩4.2, 공헌이익률은 30%, 매출액은 ₩1,200,000이다. (주)서울은 20×1년에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았다. (주)서울은 20×2년에 20×1년보다 100,000단위를 더 판매하려고 한다. (주)서울의 20×2년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주)서울이 20×2년에 ₩30,000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고정비는?

- ① ₩50,000 ② ₩75,000 ③ ₩100,000
 ④ ₩125,000 ⑤ ₩150,000

33. (주)서울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량은 500단위이고 판매량은 300단위이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 목	단위당 원가
변동제조원가	₩23,000
변동판매관리비	5,00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고 고정판매관리비는 ₩500,000이라면, 당기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초재고수량은 없으며,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00임)

- ① ₩200,000 ② ₩400,000 ③ ₩500,000
 ④ ₩700,000 ⑤ ₩900,000

34.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제품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생산량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A	제품B	계
결합원가	?	?	₩50,000
생산량	200단위	300단위	
판매단가	₩2,000	₩2,500	

제품A는 제2공정에서 제품C 200단위(판매단가 ₩3,000)로 추가 가공할 수 있다. 제품A를 추가 가공하는데 소요된 원가는 ₩200,000이다. 제품A의 판매비는 ₩150,000이고, 제품C의 판매비는 ₩100,000이다. 제품A를 모두 제품C로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⑤ ₩50,000

35. (주)서울은 20×1년에 제품A를 연간 1,500단위 생산하여 단위당 ₩400에 판매하였다. 제품A의 최대생산량은 2,000단위이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원가	₩120
· 직접노무원가	80
· 변동제조간접원가	20
· 변동판매관리비	30
· 고정판매관리비	20
· 고정제조간접원가	30

20×2년 초에 회사는 (주)한국으로부터 제품A 800단위를 단위당 ₩3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서울이 동 주문을 수락하면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중 ₩20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시장에서의 판매량 3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주)서울이 특별주문 수량을 모두 수락할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재고는 없으며, 20×2년 원가구조는 20×1년과 동일함)

- ① ₩10,200 ② ₩10,400 ③ ₩10,600
 ④ ₩10,800 ⑤ ₩11,000

36. 서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서비스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00, 공헌이익률은 40%이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가 동 서비스로부터 ₩2,000,000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매출액은?

- ① ₩6,000,000 ② ₩8,000,000 ③ ₩9,000,000
 ④ ₩20,000,000 ⑤ ₩22,000,000

37. 20×1년에 설립된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원재료 1,000kg을 가공하여 중간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한다. 제품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중간제품A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공정에서 추가 가공하여 제품C로 판매한다. 제품별 생산 및 판매량과 kg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 품	생산 및 판매량	kg당 판매가격
중간제품A	600kg	-
제품B	400kg	₩500
제품C	600kg	450

제1공정에서 발생한 결합원가는 ₩1,200,000이었고, 중간제품A를 제품C로 가공하는데 추가된 원가는 ₩170,000이었다. 회사가 결합원가를 순실현 가치에 비례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경우, 제품B와 제품C에 배부되는 총제조원가는?

- | 제품B | 제품C |
|------------|----------|
| ① ₩400,000 | ₩800,000 |
| ② ₩400,000 | ₩970,000 |
| ③ ₩570,000 | ₩800,000 |
| ④ ₩800,000 | ₩570,000 |
| ⑤ ₩870,000 | ₩400,000 |

38. (주)서울은 기계A나 기계B를 구입하여 신형자전거를 생산하려고 한다. 신형자전거가 생산되면 구매자의 선호에 따라 히트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상품이 될 수도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미래상황	
	히트상품	보통상품
기계A 구입	₩120,000	₩40,000
기계B 구입	150,000	10,000

신형자전거가 히트상품이 될 확률이 40%이며 보통상품이 될 확률은 60%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A를 구입하는 대안의 기대이익은 ₩72,000이다.
 ② 기계B를 구입하고 신형자전거가 보통상품이 될 경우 조건부 손실(conditional loss)은 ₩30,000이다.
 ③ 각 상황에 대해 80% 정확도를 가진 보고서가 있다면, 이 보고서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④ 각 상황에 대해 100% 정확한 예측을 하는 보고서가 있을 때, 이 보고서의 최대 구입가격은 ₩12,000이다.
 ⑤ 조건부 손실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대안은 기계B를 구입하는 것이다.

39. 다음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서울의 20×1년 예산자료 중, 1분기의 매입 및 매출 추정액에 관한 자료이다.

월	매입추정액	매출추정액
1	₩400,000	₩620,000
2	900,000	748,800
3	500,000	780,000

(주)서울의 20×1년 3월초 예상되는 현금보유액은 ₩50,000이다. 매출채권은 당월에 70%, 다음 달에 25%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채무는 매입한 달에 60%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의 2%는 현금할인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한다. 3월 중에 일반경비로 ₩200,000을 현금지출 할 예정이다. (주)서울이 매월 말 현금 ₩50,00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 3월에 추가로 조달해야 할 현금은 얼마로 추정되는가?

- ① ₩70,800 ② ₩80,800 ③ ₩90,800
 ④ ₩110,800 ⑤ ₩120,800

40. (주)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재공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 수량	-	완성량	80개
당기착수량	130개	기말재공품 수량	50개
합계	130개	합계	130개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주)서울은 당기에 직접노무시간 660시간을 투입하였다. 회사의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6시간이고, 표준임률은 ₩3,000이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가 ₩2,100,000이었다면,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 ① ₩120,000 불리 ② ₩180,000 불리
 ③ ₩120,000 유리 ④ ₩180,000 유리
 ⑤ ₩540,000 불리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
- ②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당해 행정청은 당해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자연녹지지역안의 지목이 대(垵)인 지역에 대해 축척 3천분의 1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 ④ 지형도면의 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인 범위는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확정된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계획으로 설치·관리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
- ②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검사시설과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속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상업지역에서 지상·지하 등에 공공공지·열공급설비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7.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등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시설보호지구 지정
- ② 개발진흥지구 지정
- ③ 계획관리지역 지정
-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전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전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④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⑤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1천100퍼센트인 상업지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550퍼센트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및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 ②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
- ③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요청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 ⑤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안의 나대지에 폐지를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③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③ 군수가 관할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 ②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행위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억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④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확정적인 무효와 유동적인 무효로 구별하고 있다.
- ⑤ 별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③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부과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하게 된다.
-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

- ①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한 자
- ③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④ 법령상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② 감정평가업자가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 ④ 감정평가사가 업무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
 - ②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 ③ 법원의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④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⑤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행정재산이라도 판결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행정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매수하여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② 국가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③ 정부기업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건물
 - ④ 국가가 임차하여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국가소유의 건물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①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②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 ③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기부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⑤ 특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6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 ②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지정한다.
 -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칭은 총괄청의 명칭으로 한다.
 -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사인이라도 국유하천에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69.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 ① 공정표의 검토
 - ② 허가권자에 대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③ 허가권자에 대한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④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⑤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의 시정요청
70.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의 확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 ④ 공개 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공개 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도시미관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건축법상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다.
- ③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2. 건축면적이 560m²이고 높이 28m인 건축물의 옥상에 좌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63m²이고 높이 9m로 된 장식탑을 세우고, 우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42m²이고 높이 14m인 옥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의 높이는?

- ① 28m ② 30m ③ 37m ④ 42m ⑤ 51m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 ②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 ③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 ④ 지적측량성과 검사
- 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적 ② 토지의 소재 ③ 지번
- ④ 지목 ⑤ 도면의 축척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 ②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유지(溜池)'이다.
- ③ 종교용지인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 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경우
- ②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 ③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④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⑤ 평방미터 단위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77.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로서의 구조를 가지는 부분
- ③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 ④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7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환매특약의 등기
- ②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
-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 ④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권리변경등기
- 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의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79.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 및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주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3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제부의 등기는 이른바 사실의 등기이다.
- ②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자의 등기는 보존등기이다.
- ③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된 사항에 후발적 변경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는 경정등기이다.
- ④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전부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기내용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는 말소등기이다.
- 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